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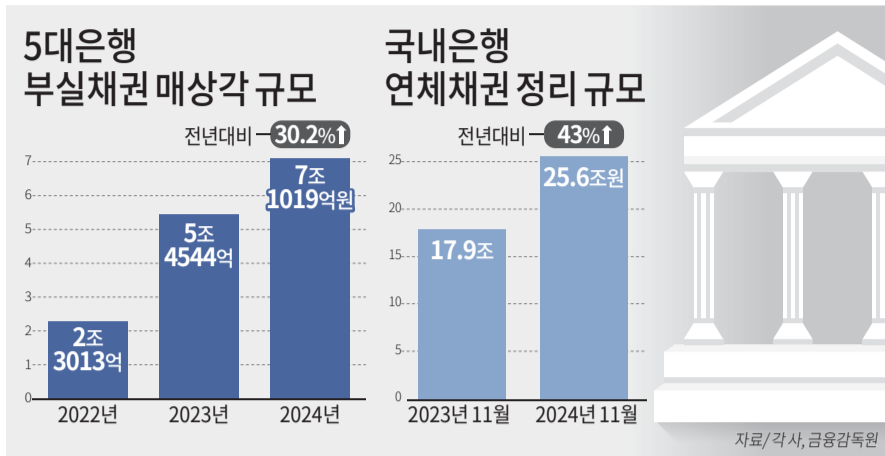
작년 5대은행 부실채권 30% 증가... 올해 규모 더 커지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장기지속
가계·기업의 연체율 늘어난 영향

작년 11월 연체채권 25.6조 정리
전년 17.9조 대비해 43% 급증
부실채권 매·상각 당분간 증가할 듯

지난해 5대 은행이 털어낸 부실채권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이후 부실을 정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도 부실채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상·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7조 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조 4544억원)과 비교하면 30.2%, 2년 전(2조 3013억원)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



가한 수준이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자산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별도로 관리하다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할값에 파는(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며 가계·기업의 연체율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52%로 1년 전(0.46%)과 비교해 0.06%포인트(p)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2년 11월 0.27%에서 2023년 11월 0.46%로 급격히 상승한 뒤 오름세를 지속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지

난해 11월 기준 0.41%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인 반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0.82%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만기 연장조치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중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9월 종료했다. 경기 회복 둔화와 원리금 상환 유예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더해 상환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이후 부실 정리도 연체율을 키웠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등급)와 부실 우려(D등급)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부실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210조 4000억원)의 10.9%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행사가 공사에 들어가면 PF는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으로 넘어간다”며 “2금융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은행권의 부실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17조 9000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문제는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가 당분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은행의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1월 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조원까지 증가한 연체채권 규모는 9월과 10월 각각 2조 5000억원 증가한 뒤 11월 2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여전히 연체채권 규모가 많아 관리 후 매·상각 하려는 채권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며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트럼프 관세폭격...’서 계속

경총 “경제학자들 전망 올해 국내성장률 1.6% 그쳐”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정부 예측 1.8%보다 0.2%p 낮아

64% ‘상당기간 성장 정체’ 응답
‘일정기간 하락 후 완만한 회복’ 35%

경제학자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1.8%)보다 낮은 1.6%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저성장도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은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장 많았으며,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중립적’은 34%,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지난달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보호무역 강화 등

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57%,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40%로 나타났다. 환율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

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행 3.00%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많았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5%,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등 관세 예고 국내 산업계-정부 정교한 대응책 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동맹국에 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가가 현실화될 경우 무역의 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6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는 오는 2분기부터 본격적이고도 광범위한 관세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멕시코, 캐나다 현지 진출 기업들도 문제지만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국내 산업계 전체가 정부와 함께 좀더 정교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권

25~54세 男 노동시장 참여도 88.6%
OECD 회원국 평균 91.6%, 3%p 차이
체코 96% 1위, 일본 95.5% 2위 차이

주요국 국민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우리나라 20대 중반~50대 중반 남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3개 분기 연속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5~54세 한국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6%로

집계됐다. 이들 나이대는 이른바 핵심 노동인구로 분류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인 91.6%(2024년 3분기)과 3.0%포인트(p) 격차를 보이며 38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이 2023년 4분기 91.5%, 1분기 91.5%, 2분기 91.5%에 비해 소폭 오른 반면, 한국은 2023년 4분기 이후 3분기째 하락했다.

우리나라 25~54세 남자는 2023년 4분기에 89.2%에 달했다가 2024년 1분기 89.0%, 2분기 88.9%, 3분기 88.6%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이 더 줄고 있다.

일본이 95.5%로, 체코(96.0%)에 이어 2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뉴질랜드가 92.6%, 호주가 90.5% 등 우리에게 앞섰다.

상위권에는 아이슬란드(95.1%), 헝가리(94.4%), 스위스(94.2%), 포르투갈(94.2%), 콜롬비아(94.1%), 멕시코(94.0%), 에스토니아(93.9%)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프랑스가 92.6%, 독일이 92.5%, 영국이 90.9%, 미국이 89.6%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 평균은 92.1%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64세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도에서 81.1%로 11위에 자리했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고령층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연령대에서 프랑스는 65.9%, 영국은 72.2%, EU 평균은 74.7%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25~54세 여자의 경우, 71.7%로 38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일본(83.6%) 대비 10%p 이상, OECD 평균(76.2%) 대비 4%p 이상 참여도가 낮았다. 또 여자 역시 55~64세는 61.8%에 달하며 OECD 평균(58.9%)보다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높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양성운 기자